

한·EU FTA 이르면 연내 발효

정부, 농축산 피해대책 이달 정식 서명후 발표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EU FTA 협상과 관련 이행법 정비 및 피해대책 마련 등의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정부의 추진 일정대로라면 한·EU FTA는 이달 중순 정식서명과 11월 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2월1일 잠정 발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구축 확대, 품질고급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기반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업분야의 직접적인 피해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수산업 피해대책을 정식서명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농민신문 9.3〉

이상한 날씨에 농업인 ‘몸살’

연초부터 이상기후로 작물피해 속출 ... 수확급감·계약금 환불·수출도 차질

연초부터 언 피해·병해로 속앓이를 하던 농업인들이 최근엔 폭염과 잦은 비로 작물 피해가 크다며 울상이다.

고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에선 고추를 보통 6~7회 수확했으나 올해는 2~3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정영만씨(62·괴산읍 제월리)는 “수확을 제때 못해 열매가 물러 썩지가 빠지는 것을 구경만 하는 실정”이라며 “지난달 말부터는 탄저병이 확산되고 개화도 제대로 안돼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충남 청양지역의 고추 피해도 만만치 않다. 8월 강우량이 368mm로 지난해의 2배 정도 많아 고추가 물러 터지는 열과 발생 증가로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추 6,600㎡(2,000평)를 짓는 최유선씨(50·청양군 화성면 농암리)는 “썩어서 떨어지는 고추가 밭에 가득하다. 예년보다 수확량이 20~30% 줄고 껍질도 얇고 크기가 작은 것은 물론 품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갑씨(50·대치면 농소리)도 “예년엔 3~4차례 수확했는데, 올해는 두번에 그쳤다”며 “기상이 나쁘면 최대 40% 수확량이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만희 청양고추연구회 회장은 “비가 워낙 자주 내려 낙과가 되거나 썩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강태식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고추 연구담당은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관리를 잘하고 비가 그칠 때 방제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막바지 수확을 앞둔 고랭지배추도 망가지기는 비슷하다. 해발 1,303m까지 고랭지배추 단지를 조성한 강원 태백의 경우 80%가량 수확을 끝냈지만 콧물처럼 진이 나오고 물러 터지는 ‘콧병’으로 건질 게 많지 않다고 걱정한다. 김창한 태백농협 조합장은 “예년에는 배추 수확을 이달 말까지 했으나 올해는 작황이 나빠 10일이면 끝날 것 같다”며 “밭떼기 거래를 한 농가에서는 상인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줘야 할 정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시설하우스도 햇빛 부족으로 작물이 약해지고 수확량이 적어 값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고온다습한 기후로 과수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언 피해와 냉해에다 잦은 비로 복숭아 농가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최윤화 충북 음성 감곡농협 복숭아작목반연합회장은 "언 피해와 냉해로 결실이 제대로 안되는데 8월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내린 비로 탄저병이 발생, 꼭지가 무르고 당도도 떨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사과의 경우 <홍로>에서는 탄저병이, <후지>는 탄저병과 겉무늬썩음병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7개 사과시험장 과원을 조사한 결과 갈색무늬병은 전 과원에서 발생한 가운데 피해율이 최고 49.8%(평균 14.7%)로 지난해(20.6%)보다 두배나 많았다.

포도 역시 고르지 못한 기상으로 숙기가 지연되고 열과도 나타나면서 물량 부족에 따른 수출 차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국 충북 영동 황간농협 수출작목회 감사는 "비가림 재배를 하다 보니 숙기가 10~15일 정도 늦은 것 외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며 "하지만 태풍 '곶과스'가 지나가면서 많은 비를 뿌리면 열과 발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농진청은 잦은 비로 고추 탄저병과 사과 갈색무늬병·탄저병 및 복숭아순너방 등이 퍼지고 있어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 방제와 더불어 병든 과실은 썩어서 땅속에 파묻는 등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농민신문 9.3>

타마스+시엠스타 농업분야 사상 최대 박람회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SIEMSTA)와 대전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TAMAS)를 아우르는 '2010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가

오는 11월3~6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TAMAS 전경.

267업체 농기자재 2만여㎡에 전시 '세계적 수준' ... 6개 대형 농기계업체 모두 참가 ... 농약·종자 다양

농민신문사(사장 박재근)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헌), 충남 천안시(시장 성무용)가 오는 11월 3~6일 충남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공동주관하는 '2010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 내용과 참가업체의 주요 제품을 소개한다.

KIEMSTA 사무국은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SIEMSTA)와 대전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를 아울러 올해 처음 열리는 KIEMSTA에 모두 267개 농기자재업체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농업분야 관련 국내 전시회 중 최대 규모다. 또 농기자재 전시면적도 2만여㎡(6,000여평)로 SIEMSTA에 비해 2.7배나 커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품목별로는 경운·정지·재배관리기계가 77개로 가장 많고, ▲시설농업기자재 53개 ▲수확·농산물 가공·포장기자재 45개 ▲부품과 농자재 및 바이오 32개 ▲축산기자재 28개 ▲이앙(이식)·파종기계와 임업기계 각 16개 등이다.

업체별로는 대동공업·동양물산·국제종합기계·LS엠트론 등 국내 업체 4개와 안마농기코리아·한국구보다 등 일본 농기계업체의 국내 법인 2개 등 종합형 업체 6개가 참여해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최신 농기계를 선보인다. 또 한아에세스·SG한국삼공·아시아종묘 등 방제기·농약·종자업체 및 친환경농자재업체, 부속 농작업기업체 등도 참가한다.

장길수 KIEMSTA 사무국장은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업체들이 참가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면서

“특히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해외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 국산 농기자재 수출 촉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농민신문 9.6〉

“쌀 해결 · 친환경급식 추진 집중”

농민연합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제5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쌀 문제 해결 등 남은 하반기 활동 계획을 논의, 의결했다.

농민연합이 통일 쌀 보내기 운동 및 기금 모금,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농민집회 등 쌀 문제 해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남은 하반기 역량을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전국 9개 농민단체가 소속된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지난 6일 국회에서 2010년도 5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농민연합 투쟁 계획’을 논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민연합은 우선 오는 16일 민간차원의 통일 쌀을 북한에 반출하기로 하고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농민연합은 아울러 통일 쌀 보내기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기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연합은 쌀 문제를 비롯한 농협개혁, 한·미와 한·중 FTA 등 주요 농정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전체 농민단체 시군 이상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오는 10월경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정치권에서 제안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결의대회 및 대토론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어 12월에는 농민연합 소속 단체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각종 농업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농민연합은 이날 6·2지방선거 이후 정체돼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농민연합 내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9.9〉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염과 농업재해로 가축이 폐사·유실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업재해시 어린 가축의 구입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폭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한편 농업재해로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와 사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농민신문 7.28〉

쌀값 15년전으로 후퇴

올 공공비축미 34만t 27일부터 매입산지 쌀값이 급락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3만원대(80kg 기준)가 무너졌다.

이에 따라 ▲2009년산 민간재고 추가격리 ▲대북 쌀지원 재개 등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0일 단위로 내놓는 ‘쌀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29,92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25일에 비해 384원(0.3%) 낮은 가격이다. ‘올 수확기 수요를 초과하는 쌀을 모두 격리하겠다’는 정부의 초강도 대책도 하락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회계연도 기준 산지 쌀값이 13만원 아래로 형성된 해는 15년 전인 1995년이 마지막이다.

산지 쌀값이 급락하는 주된 이유는 시중 민간재고가 많기 때문이다. 양곡업계는 햅쌀이 본격 쏟아지는 10월에도 2009년산 구곡이 10만t 이상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산에 대한 추가격리 계획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및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2011 양곡연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수확기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은 34만t으로 지난해의 37만t에 견줘 3만t(8.1%) 감소했다. 34만t 가운데 28만t은 건조벼, 6만t은 물벼 형태로 사들이며, 매입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최종 매입가격은 '시가 매입'이란 공공비축제의 원칙에 따라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해 산정한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 조사 결과 선급금(우선지급금)보다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내년 1월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거꾸로 쌀값이 낮으면 초과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등급별 선급금은 이달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계청이 내놓을 올해 쌀 수확량 중 연간 신곡 소비량 426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하기로 했다. 매입가격 및 격리방식은 공공비축제와 동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15 작황조사가 나오는 10월 초쯤 지역별 추가매입량을 우선 배정한 뒤 쌀 생산량이 최종 확정되는 11월 초에 매입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만t의 정부양곡을 가공용으로 방출해 2011년도 기말(10월 말) 재고량을 올해의

1,492,000t(예상치)보다 274,000t 줄어든 1,218,000t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 농민신문 9.10〉

농식품부 '유통구조개선기획단'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채소값 폭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도매시장, 생산자 대표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기획단을 통해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정복 장관이 심의대책위원장을 맡아 유통구조 개선 대책 수립 작업을 진두지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우선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급불안정이 상시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기존 풍작에 대비한 수급 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초점을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또 농업관측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 구매의사를 반영하고, 농협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약재배 사업도 관측과 연계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우월적인 교섭력을 지닌 대형유통업체와 조직화·규모화가 쉽지 않은 산지조직간에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단체 중심의 불공정 거래감시, 농수산물에 특화된 공정거래기준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거래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채소류 거래, 도매시장의 거래방식 개선, 사이버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 농업인신문 10.8〉